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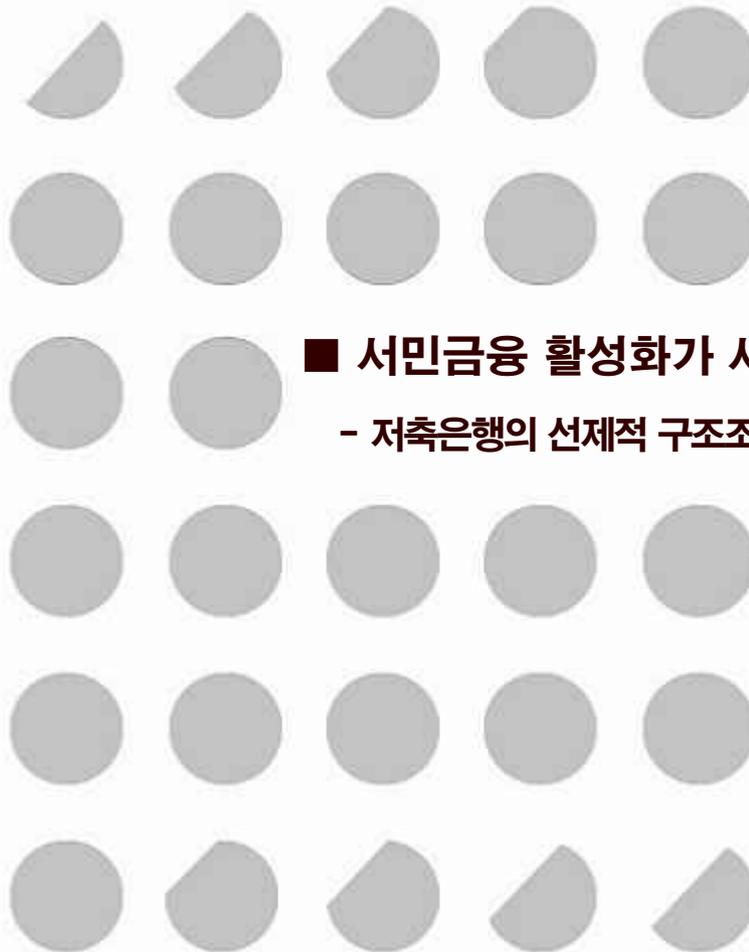


09-05 (통권 334호)

2009.1.3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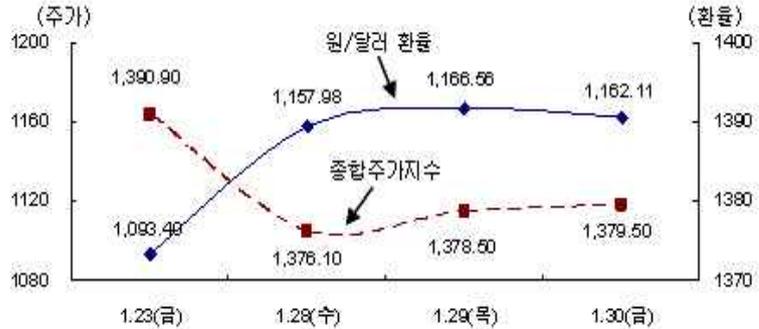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
-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대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3~1.3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서민 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	
-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대안	1
주간 경제 동향	14
□ 실물 부문 : 경기 침체 가속화	14
□ 금융 부문 : 주가 및 금리의 급변동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

-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대안

서민금융의 위기와 원인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금융 여건도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미분양아파트 등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문제, 정부지원, 인수합병 (M&A)과 퇴출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발생의 원인으로 첫째, 외환위기 이후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시중 자금을 독점한 은행의 예대마진은 갈수록 확대된 반면 수신확보를 위하여 고금리예금 정책을 펼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상당 기간 축소되었다. 이에 2001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상 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였다.

둘째, 새로운 수익모델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PF대출 비율이 급증하였다.

셋째, 저축은행들은 저금리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상당 부분의 시중 자금을 흡수할 수 있었던 점도 부동산대출 확대를 부추켰다. 서민의 자산형성 기회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의 예금보호제도를 이용한 중산층 이상의 안전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기를 모우고 있다.

넷째, 성격상 서민에 대한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은 가장 과학적인 첨단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

저축은행 부실화의 문제점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미흡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먼저 국

내경제 하부구조와 하층계층의 경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나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서민 가계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둘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저축은행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셋째, 금융 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

국내 경제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금융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축은행의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화 대응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방은행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적으로 은행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서민의 뭇 돈 마련 '자금형성에 있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고금리 수신 대신 세계혜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이 가지지 못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 먼저 내부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개별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되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 >
-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대안 -

서민금융의 위기와 원인	
- 위기 :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서민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부각되고 있어 구조조정 문제가 지속 제기
- 원인 :	은행과의 차별적인 수익모델 부재로 상대적 경쟁력 열위 부동산경기 호황시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 무리한 고금리 수신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조달비용 부담 과학적인 심사,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

저축은행 부실화의 문제점	
서민 가계생활 악화	서민 금융 위축으로 인해 저신용 서민 가계 생활 악화가 심화
금융위기로 확산	PF 부실 등이 타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경제성장 기반 약화	금융-실물 경기 침체 악순환 고리 형성, 서민 경제력 약화 지속 이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경제성장 기반 약화

저축은행 기능 활성화방안	
차별적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化 - 중소 저축은행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 역할 담당
경쟁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자산 형성과 조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세제 혜택 필요 - 빠른 의사결정, 유연성 등을 활용하여 서민 맞춤대출서비스 대출환승론(loan) 등 지역 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
과학적인 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능력 제고로 연체율 감소 및 가격정책 수립 -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1. 저축은행의 성장과 위기

○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 금융여건도 불안해지고 있음. 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고조

- 저축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퇴출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의 호황 때 그 수가 크게 증가함
 - 본점 수는 1999년 6월 113개(1997년 말 231개)에서 2008년 6월 107개로 축소되었으나, 지점과 출장소 등 함께 점포수는 159개에서 325개로 급증
 - 한편 임직원수도 1999년 6월말 4,210명에서 2008년 6월말 7,825명으로 확대
- 저축은행의 자산과 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각기 평균 17.4%와 20.64%를 기록
 - 자산도 2000년 이후 대출 증가에 힘입어 1999년 6월 말 15.7조원에서 2008년 6월말 63.5조원으로 4.05배 증가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자산은 623.9조원에서 1,580.5조원으로 2.54배 증가)

< 저축은행의 자산 및 대출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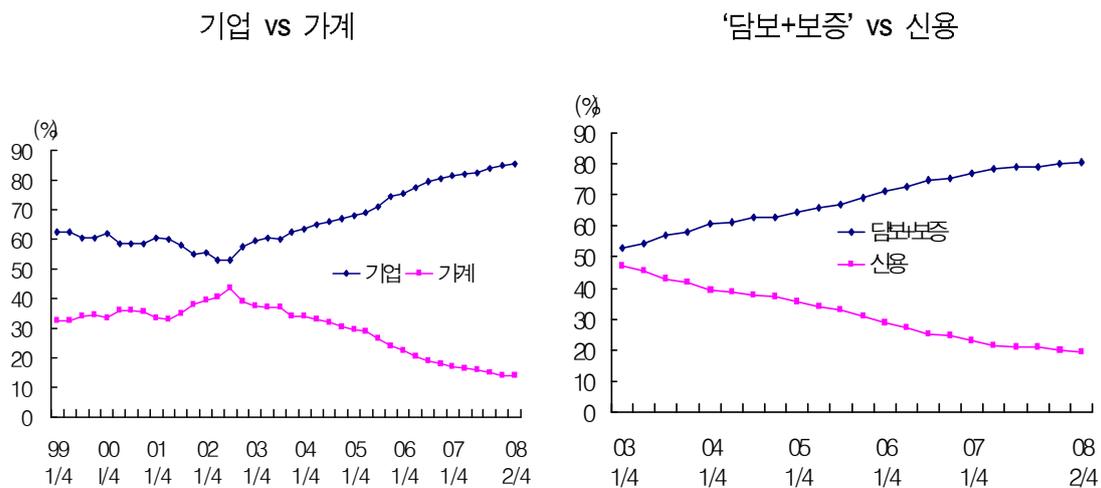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전년동기비.

○ 저축은행들은 2000년 이후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고위험 부동산담보 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치중함

- 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 제공 목적으로 설립
 -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한 상호신용금고가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
 -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등의 내국환 업무로 은행과 거의 유사
- 하지만 2002년 이후 부동산 PF 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치중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대출은 축소
 - 2002년 부동산 경기 호황 시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 대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2분기 현재 8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은 크게 줄어들어 그 비중이 13.7%에 불과
 - 부동산 등 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2분기 현재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보나 보증 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여 19.4%를 차지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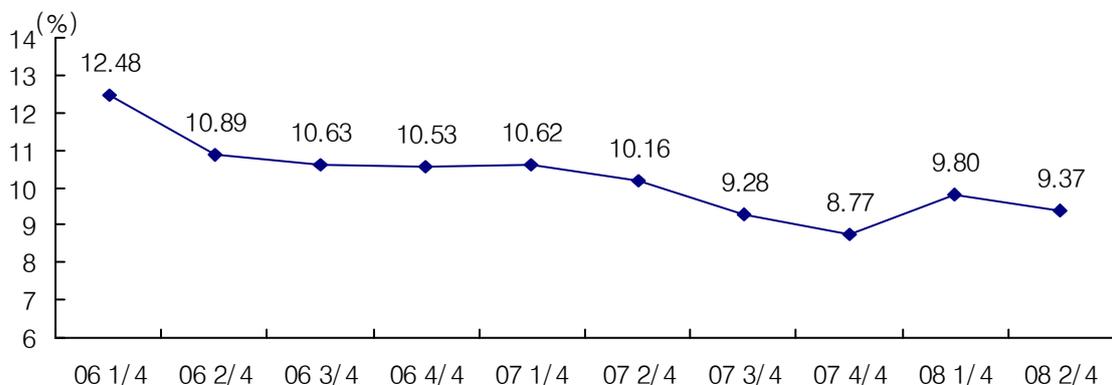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미분양아파트 등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 밖으로 부각되면서 자칫 문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이 적극적인 부실정리 노력 및 리스크관리 능력제고 등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
 - 부실여신비율 감소는 PF 대출의 워크아웃 편입에 따라 연체중인 PF 대출 일부가 이자유예 종료시점까지 미연체로 분류되어 자산건전성이 양호해 보이는 착시현상일 가능성(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08년 봄호)
- 정부의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산 매입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와 PF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PF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
 - 미분양 물량 증가와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난에 빠진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문제, 정부지원, 인수합병(M&A)과 퇴출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한편 2009년 초 정부는 1조 3,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저축은행권의 부실 부동산 PF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여신 비중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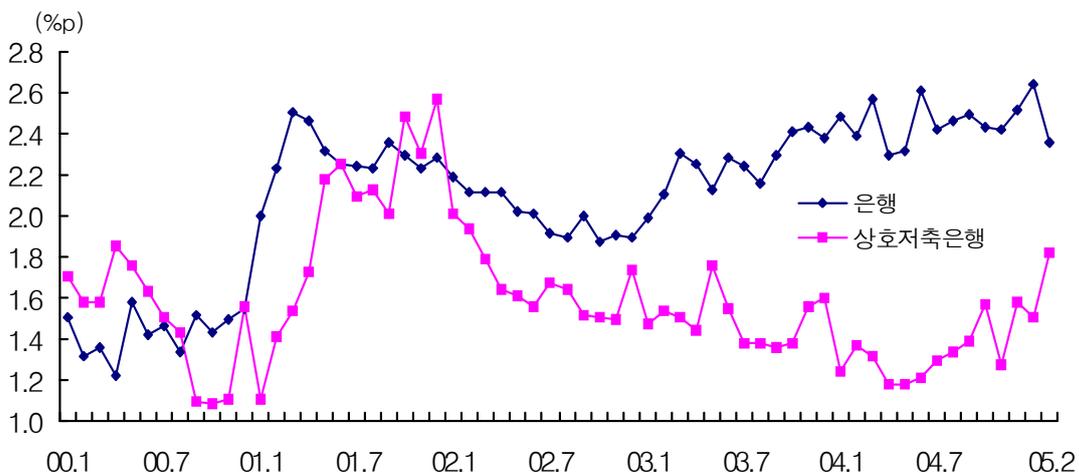
주 : 고정이하여신비율.

2. 위기의 원인

○ (차별화된 수익모델 부재)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들이 비슷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절실히 모색함

- 외환위기 직후 신속히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진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들은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집중
 - 저축은행의 경우 2001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상 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었음
- 당시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요구
 -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도 시중자금을 독점한 은행의 예대마진은 갈수록 확대된 반면 수신확보를 위하여 고금리예금 정책을 펼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상당 기간 축소

< 2000년대 초반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과도한 부동산관련 대출)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0년 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함

-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 시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를 상회
 - 2008년 2월 현재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대출은 총 대출금 48.2조원 중 24.2조원으로 50.2%의 비중을 차지
 - 한편 담보대출의 대부분인 부동산담보 대출규모는 2001년 9조원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6월말 현재 40조원을 상회
- 특히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비율이 급증
 - 저축은행들은 PF의 높은 위험성을 이유로 특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형 시행사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기업대출금리 보다 높은 연 10%대의 금리를 부가
 - 2008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금융기관의 PF대출 규모 65.4조원 중 저축은행이 12.2조원을 차지(은행 47.9조원, 보험 5.2조원)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

(단위 : 조원, %)

	'07. 06		'07.12		'08.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대출금	42.8	100.0	47.1	100.0	48.2	100.0
부동산관련업	22.2	51.8	23.7	50.3	24.2	50.2
PF	12.4	28.9	12.1	25.7	12.3	25.5
건설업	4.5	10.5	5.1	10.8	5.2	10.8
부동산업	5.3	12.4	6.5	13.8	6.7	13.9

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08년 봄.

○ (무리한 고금리 수신 경쟁) 당시 초저금리 시대에서 자산운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결국 조달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금리 수신 경쟁을 지속하면서 상당 부분의 시중 자금을 흡수함

- 2002년 이후 실질금리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를 지속
 - 예컨대 2004년 7월 당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8%, 물가상승률은 4% 수준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 여기에다 당시 16.5%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질실효금리는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지속함
-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 및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
 -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식, 금리, 환율, 부동산 등의 가격 급등락 심화로 대부분 개인들은 금리 이외 다양한 투자 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
 -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자금이 거액예금 유치에 힘을 쏟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으로 이동)
 - 중산층 이상 계층이 안전 자산 형성을 위하여 5,000만원까지의 예금보호제도를 이용한 분산 예치하는 수단으로 변신

<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1년 정기예금.

1) 2000년까지만 해도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중 2,0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의 비중이 47%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2004년 6월말에는 17%로 급감

○ (과학적인 경영 능력 미흡) 성격상 서민에 대한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은 가장 과학적인 첨단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함

-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
 - 저축은행의 성격상 신용리스크가 큰 고객에 대한 소규모 대출과 금리민감도가 높은 고객으로부터의 정기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용리스크와 금리리스크가 높음
 -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해 서민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은 더욱 위축됨
 - 특히 지역에서 받은 예금을 지역에서 운용하지 않고 중앙조직에서 운용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

-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은 소매금융의 핵심으로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인프라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인 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상황
 -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결과(2007.5) 응답 상호저축은행(88개)의 73.9%(65개)가 개인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금융위원회 '07.10.30 보도자료 참조)
 -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는 최근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자료, 정보수집 기관 자료 등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매우 중요하나 개별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低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²⁾

2) 현재 개인이나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은 은행연합회 및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저축은행 업계와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정보의 유용성에 제한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부리프 2008. 8. 2, 17권 31호 참조)

3. 저축은행 부실화의 문제점

○ 경제 하부구조와 하층계층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나 서민금융 위축으로 인하여 서민 가계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 대비 低신용 서민금융 지원 비율은 소액신용대출 축소 등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
 - 소액신용대출(개인대상 300만원 이하)의 경우 2.8조원(2002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 가계신용 위기 이후 부실화되어 2007년 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0.8조원에 불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년 10월)에 의하면 200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13.1조원(총대출의 30.1%), 이중 低신용(7~10등급)자 대출은 8.0조원(60.8%)으로 총대출대비 비중이 18~21% 수준

<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현황 >

(단위 : 억원, %)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6말
소액신용대출	28,261	23,823	20,172	14,922	10,545	7,583
연체액	8,174	12,206	12,270	8,648	5,881	3,729
연체율	28.3	51.2	60.8	58.0	55.8	49.2
총대출대비 비중	14.7	9.8	6.7	4.3	2.5	1.8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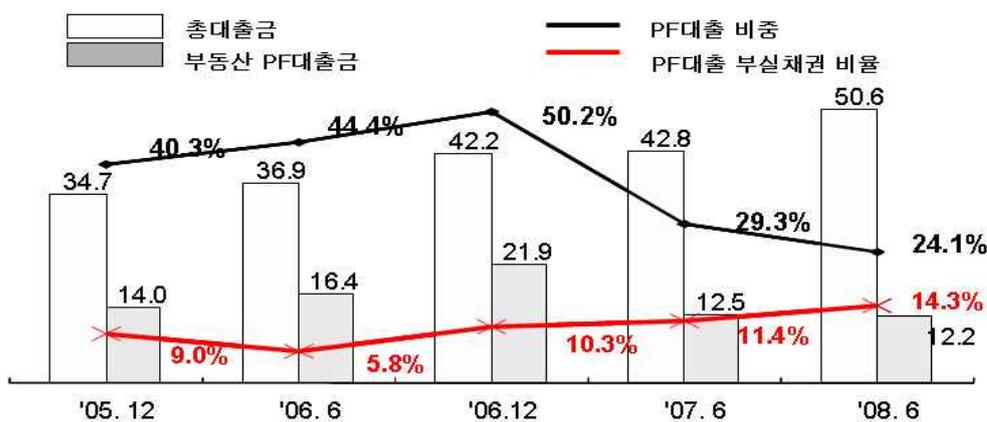
-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서민경제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건설경기 침체와 PF 대출금리 상승으로 PF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
 - 미분양 물량 증가와 대금회수 지연으로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 저축은행 등이 많이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규제 미비로 LTV 비율이 60~90%에 달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
 - 수년간 급성장한 국내 부동산 PF 시장과 ABCP 시장의 부실화 될 경우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경우 사업승인 이전의 사업초기단계(사업부지 매입계약, 잔금납부 등) 대출에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엄밀한 대출심사 없이 브리지론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큰 부실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PF 대출 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등의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달리 1차 유동화에 그치고 있고, 최근 급증한 ABCP의 경우 은행이 약 80% 정도 매입약정을 맺고 있어 저축은행의 PF가 부실화되더라도 투자자의 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권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조기 자금상환 압력 등이 거세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

- 이러한 불안이 금융-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음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세수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고소득 계층의 세원 파악이 쉽지 않는 국내 조세 행정상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재정지원은 중·저소득층의 세원 부담을 급증시켜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

 -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이들의 경제력은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속성장 기반이 잠식
 - 금융기회의 편중과 고용기반 약화의 악순환은 낙후부문의 확대와 재정부담의 가중을 통해 양극화 추세 확대 요인으로 작용
 -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과도한 위축은 금융체계 전반에서 금융시장 내에 블랙홀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서민경제활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상공인의 사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수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민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안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으며 생존 위협에 직면

4. 저축은행 기능 활성화 방안

○ (구조조정)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함

-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化)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화 대응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
 - 인수합병을 통하여 외형을 확대한 우량저축은행은 여신확대가 용이하면서 대형화에 성공
 - 예컨대 솔로몬 저축은행(경기, 부산, 호남의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의 경우 2008년 6월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 3천억원에 이룸(같은 시점의 제주은행 2조 9천억원을 뛰어넘고, 전북은행 6조 5천억원 수준임)
 -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化 하되, 외환업무 제한 등으로 국제업무 위주의 건전성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할 필요
 -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한 일본의 제2지방은행 벤치마킹을 검토
- (중소형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化)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킴
 - 본래의 서민금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절실(외환위기 직후 은행권에 가해진 수준 정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부실서민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우량정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차별화된 감독정책 실시
 -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서민금융기관의 활동을 제고
 - 기존의 광범위한 담보체계를 가급적 시장정보화 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신용공급체계에 안정성을 확보

○ (경쟁력 확충) 서민금융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수신구조 개선)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 현재의 고금리 수신은 그 혜택이 서민의 자산 형성 보다 중산층 이상의 금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높은 조달비용 부담으로 작용
 - 「고금리 수신 → 고금리·고위험 운용 → 고위험 비용 발생 → 경영성과 부진 → 대외신인도 하락 → 고금리 수신」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
 - 높은 자금조달 비용으로 여신금리를 은행보다 높게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이 불가능
 - 서민의 '뭇 돈 마련' 자금형성에 있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고금리 수신 대신 저소득층 서민의 자산형성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접근할 필요

- (수익모델 확보)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이 가지지 못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이 필요
 -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대형금융기관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목표시장을 특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고유 업무에 전력 집중·투입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³⁾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각종 규제와 경쟁심화로 영업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투자은행업무와 제휴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할 필요 (예컨대 SOHO, 소규모 중소기업 등의 M&A 관여)
 -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

3)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가계 등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함

-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이 절실
 - 저축은행 자체의 크레딧뷰로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무담보 신용담보대출을 할 필요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할 필요

- (통계시스템에 의한 리스크관리)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되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
 -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스코어링(scoring) 방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로짓모형 등과 같은 통계적 방법이 요구
 -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일상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등 내부 통제제도 확립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기 침체 가속화

○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8.6%로 10월의 -2.3%, 11월의 -14.0%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하락 폭도 커짐

- 소비 부문의 경우 12월 소비재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7.0%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소비 회복세를 나타내는 내구재 부문이 -14.5%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지수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4.1%를 기록하였고 국내 건설기성 증가율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8.7%를 기록함
- 한편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1월의 96.4보다 2.7p 낮은 93.7을 나타내었고, 경기선행지수(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0.6p 하락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4/4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3.4(-5.6)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5.5	-7.0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16.8	-24.1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3.7	33.5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9.9	-17.9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11.5	-18.6
		취업지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67	2,325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1	3.3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9.0	-21.6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86	75	9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65	3	-79	15	5	
물가	생산지물가	0.9	1.4	1.2	3.0	5.1	9.0	11.3	8.0	5.6	
	소비지물가	2.2	2.5	2.3	3.4	3.8	4.8	5.1	4.5	4.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주가 및 금리의 급변동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대폭 상승

- 금리: 실물경제 지표가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채발행물량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2.59→2.86%)
- 환율: 엔화는 글로벌 주요 주가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면서 전주말 대비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우려 고조 등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해 약세 시현 (\$/€ : 1.2975→1.2954, ¥/\$: 88.75→90.03)

○ (국내 금융 시장) 국채금리 급등

- 주가: 설 연휴기간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전주말 대비 급등 (1,093.4→1,162.1)
- 금리: 2008년 12월 광공업생산의 18.6%(전년동기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국고채 3년물 입찰을 예상한 증권사, 선물사 등의 국고채 매수세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급등 (국고채 3년 수익률 : 3.38→3.59%)
- 환율: 역외 NDF 환율 상승, 월말 결제수요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에 따른 달러화 차익실현매물 출회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하락 (1,390.9→1,379.5)

○ (전망) 금융시장 불안 지속과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주가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1.23	1.3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093.4	1,162.1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38	3.59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90.9	1,379.5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8,077	8,149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7,745	8,251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59	2.86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4	1.28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2975	1.2954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88.75	90.03
	두바이(\$/바렐)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2.41	42.9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9) 기준.